

# 정치평론가 “野 ‘검사탄핵’ 명분 부족·국민 납득 어려워”

발의 전 수사 의뢰 등 절차 있어야  
효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국한  
역풍 가능성... 여론 나빠질 수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탄핵이 명분이 부족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들의 탄핵 사유로, 강백신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한 점을 들었다. 김영철 검사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또,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들었고, 엄희준 지청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제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거나 관련한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탄핵하는 것은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하는 등 여의도와 서초동의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 절차에 따른 탄핵소추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명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 평론가는 “의혹이 있는 검사를 탄핵하려면 발의 전 단계에서 헌법 위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본다든지, 검찰에 조치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울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검사들의 과거 행위에 대한 문제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 정상이다. 뒷처리 사법부가 있다”고 반문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함께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탄핵을 추진해 검사의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검사 탄핵 추진의 효과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민하 평론가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사들을 흔내주는 모양새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만족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스펙트럼의 유권자층에선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이다.

다만, 김 평론가는 “윤석열 정권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지지층을 확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시점에서 지지층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보수 강경 지지층이 좋아하는 이슈에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되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채진원 교수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역풍이 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그걸 지켜보는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 인천·충청·TK로 뻗어나가는 與 당권 레이스

한동훈·원희룡, 인천시청 찾아  
22대 총선 참패 책임 공방 벌여  
나경원 “후 이겨본 당 대표 필요”  
윤상현 “권력싸움에 당 분열 우려”

4인의 당 대표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광역시를 찾았고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각각 대전과 TK(대구·경북)를 찾아 당심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집중했다.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저마다 만난 뒤 기자들에게 당권 도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21~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것을 두고 평소에도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를 열어 지역 밀착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이 자신이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면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지금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총선에서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

윤상현 후보도 인천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발언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의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면서 “저는 당내 선거에서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도전장을 던진 바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지역 발전 구상을 펼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때 인천 발전을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

도)-B·D, 인천에서 부천·하남까지 직통,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등을 아직 다 못했다”면서 “유 시장님이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요 국정수행도 같이 해왔던 동료이자 협력자이기 때문에 인천 소속(당협)위원장으로서 시장님 표정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제가 전력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저라면 비대위원 구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용기있게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로 구성했을 것”이라며 “제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총선 지휘 경험 없는 분에게 공천 전략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충청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잇따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나 의원은 이장우 시장을 만나 ‘충청소외론’에 대해 “역대 대선에서 충청에서 이겨야 그정당이 이겼다”며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고 영남과 호남 쪽에서도 가운데 있는 충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의원은 SNS를 통해서 원희룡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나 의원은 “원 전

장관계서, 본인이 지난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면 총선 참패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정작 본인의 선거 결과는, 전혀 정반대를 말해줍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무려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원 후보가 총선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젓갈씨’를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보궐선거 성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저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탈환했다. 선거는 전략과 공약으로 치르는 것이다. 선거는 민심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이기는 방법을 아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재명을 이겨본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틀 연속 TK를 찾은 윤상현 의원은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는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싸움”이라며 “누가 이기든 당이 분열될 공산이 크고, 이로 인한 당의 후유증이 너무나도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與 필리버스터에도 순직해병 특검법안 국회 통과

與 항의에 종결 표결 절차 진행

국회가 4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 상정에 항의하며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실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야당 주도로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

리했다.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필리버스터 시작에 맞춰 신청함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후 3시54분께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광 의원에게 발언 마무리를 요

청했다. 광규택 의원이 우원식 의장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나가자 우 의장은 오후 4시10분께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려고 하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우 의장의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토론 종결 시도

에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 의원 발언 도중에 안건을 처리하려는 데 항의하면서 토론 기회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이어가자, 우 의장은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자, 국민의힘에서 지명된 감표 위원들은 감표 위원석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시 감표

위원을 지명해 표결 절차를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실은 순직해병 사건이 공수처 등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고 추후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 주도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